

2 신용경색 상황의 지속

- (현황)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축소되는 전형적인 신용경색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원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강화 노력, 정부의 불합리한 부실 기업 처리, 금융기관의 신용 창출 여력 약화 등이 신용경색의 원인임
- (파급 효과) 건실한 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 부도 증대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증대, 실물 경제의 지나친 위축 등이 예상됨
- (대응 방안) 처리 대상 은행을 조속히 선정하고 생존이 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는 2000년말 이전까지 BIS 비율 규제를 공식적으로 완화해 주어야 함

□ 현황

-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심각한 신용경색(credit crunch) 현상이 진행중임

-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에 다소 여유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을 기피하고 금융권내에서만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고금리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기업조차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전형적인 신용경색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2월부터 신규대출 감소 및 기존대출의 상환으로 크게 줄어들기 시작한 은행의 월간 순대출은 4월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5월 들어서는 다시 크게 하락하였음
- 3월까지 부족한 은행 대출을 보완해 주던 회사채 시장도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접근이 용이치 않은 형편임

<은행대출 및 회사채 발행 추이¹⁾>

(단위: 억 원)

	9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은행대출 ⁴⁾	72,853 (28,599)	23,710 (31,613)	5,276 (48,020)	12,442 (30,797)	5,174 ³⁾ (10,480)
회사채	20,014 (11,828)	16,857 (6,086)	17,481 (7,000)	2,017 (11,889)	-1,375 (5,786)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주 : 1) 신규대출 및 회사채 발행에서 상환을 차감한 월간 순증가분

2) 신탁대출 제외, 3) 5월1일~28일, 4) ()는 97년 동월

□ 신용경색의 원인

-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강화 노력) 금융기관들이 생존을 위하여 자산건전성의 확보에 나서면서 대출을 감축시키고 있음

- 지난 4월말 금감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12개 은행(97년 12월말 기준 BIS 비율 8% 미달 은행)중 대부분이 98년말까지 BIS 비율을 8%로 맞출 계획임
 - 그러나 증자 등 자본확충 계획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음에 따라 유일한 대안인 대출 축소에 나서고 있어, 97년말 현재 184조 9,379억 원으로 일반은행 총여신의 49.3%를 점하고 있는 12개 은행의 대출 축소만으로도 심각한 신용경색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정부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은행들에 대해서도 향후 BIS 비율이 8%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면 강력한 자구 계획을 요구할 것이므로, 여타 은행들도 100% 위험 자산인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영업중인 16개 종금사도 자기자본비율을 오는 6월말까지 6%, 99년 6월말까지 8%를 충족시켜야 함에 따라 대출 긴축을 지속하고 있음
- (불합리한 부실기업 처리) 불합리한 부실기업 처리 방식으로 비교적 건실한 기업의 신뢰도도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고 있음
- 정부가 명백한 부실 기업은 협조 용자 등을 통해 구제하는 반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처리 대상 기업을 다시 선정하게 하는 모순을 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건실한 기업들의 신뢰도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부실 기업에 협조 용자 및 화의의 형태로 대규모 자금이 저리로 지원됨에 따라,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축소시켜야 하는 금융기관들이 우량 기업에 지원될 대출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음
- (금융기관의 신용 창출 여력 약화)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하락함에 따라 현금통화 비중이 증대하여 예금을 통한 금융기관의 신용 창출 여력이 약해졌음
-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예금통화에 대한 현금통화의 비중이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음¹⁾
 - 따라서 통화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증대시켜도 현금 통화 수요가 크게 증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 통화 수요는 줄어들어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여력이 약해짐

1) M2 구성 항목을 이용하여 현금통화와 예금통화의 합에서 현금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본 결과, 동 비율은 97년 10월말에 약 38%에서 98년 1월에는 약 44%까지 상승하였음

□ 신용경색의 파급 효과

- (기업 부도 급증) 신용경색은 기업의 원활한 현금 흐름을 차단하여 상대적으로 건실한 기업의 부도 가능성도 증대시킬 것임
 - 고금리 상황에서는 채무구조의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상대적으로 건실한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만 가능하다면 흑자 도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그러나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면 경기 침체로 거의 대부분 기업들의 내부유보에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흑자 도산 기업이 양산될 가능성이 큼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증대) 기업 부도율의 상승과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 92년부터 97년까지의 어음부도율에 대한 무수익여신 규모의 변화율이 98년에도 유지된다면, 98년말에는 일반은행의 무수익여신이 97년말의 22조 6,427억 원보다 52.9% 증가한 약 34조 6,308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²⁾
 - 이러한 추세가 금융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97년말에 45조 1,360억 원이었던 무수익여신이 98년말에는 약 69조 129억 원에 달하게 되며, 3~6개월 이자가 연체된 요주의 여신을 포함할 경우 97년말 67조 8,000억 원에서 98년말에는 약 103조 6,000억 원에 달하게 됨

<어음부도율 및 일반은행 무수익여신 추이와 전망>

(단위: 억 원, %)

	'92	'93	'94	'95	'96	'97	'98(추정)
어음부도율	0.12	0.13	0.17	0.20	0.17	0.52	0.76 ¹⁾
무수익여신	103,472	124,479	117,227	124,839	122,255	226,427	346,308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

주: 1) 한국금융연구원의 추정치

- (실물 경제의 위축) 총수요의 위축을 통해 실물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것임

2) 한국경제연구원("부실채권에 대한 추정치 및 근거")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어음부도율에 대한 부실채권 규모의 변화율을 계산한 후,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98년 어음부도율 전망치를 근거로 98년 부실채권 규모를 추정하였음.

· 어음부도율에 대한 부실채권 규모의 변화율

$$= (97년 부실채권 - 96년 부실채권) / (97년 어음부도율 - 96년 어음부도율)$$

이 글에서는 특정 한 개 연도만 고려하여 위의 공식을 계산할 경우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93년부터 5개 연도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였음.

- 통화 및 재정 긴축이 점차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총수요의 위축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도 1990~91년에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강화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경기 침체를 겪을 당시에 소비 및 건설 투자 등 내수의 침체가 과거의 경기 침체에 비해 심각하게 나타났음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시사점)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으면 금융 및 외환위기의 재연 가능성은 상존함
 - 통화긴축을 완화하여 금융기관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더라도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한 기업 부도 증대 및 금융기관의 부실 여신 증대는 피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은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엔화의 지속적인 평가 절하 및 동남아 외환위기의 재연과 같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와 파업과 같은 대내적인 여건 악화가 겹칠 경우 금융 및 외환위기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음
- (대응 방안) 처리 대상 은행을 조속히 선정 한 후 희생이 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는 2000년말 이전까지 BIS 비율 규제를 공식적으로 완화해 주어야 함
 - 통화 당국이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 증대를 통해 대출을 독려한다 하더라도 생존의 기로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음
 - 즉, 99년부터는 BIS 비율 계산時 국제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대부분 은행의 BIS 비율이 1~2%p 하락할 전망이어서, 2000년 이전까지 8% 이하의 BIS 비율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불명확한 입장 표명만으로는 대출 긴축이 완화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IMF와의 협의를 거쳐 은행 BIS 비율 규제를 예컨대 99년 상반기말까지 6%, 2000년 상반기말까지 7% 정도로 명확하게 설정해 주면 은행들이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자본 확보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구축할 여유가 있을 것임
 - 그러나 부실 은행 처리가 명확하게 공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BIS 비율 규제를 낮출 경우 금융구조 조정의 후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12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평가를 조속히 완료하여 처리 대상 은행을 선정 한 후 생존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 한해서만 BIS 비율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할 것임

(김 재 칠 jckim@hri.co.kr ☎724-4022)